



중동 전황
2~5면

북한군,
러시아 파병?
6면

명태군 스캔들
10면

미국 대선
11면

레바논인 활동가
인터뷰
16, 15면



‘북한군 파병설’ 띄우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검토하는

윤석열 정부

관련 기사 6면

이스라엘의 제한된 확산 전환

미국은 중동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이스라엘의 레바논 전쟁을 지원한다

김인식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나스랄라(헤즈볼라 지도자) 살해를 축하했고 레바논 공격을 지지한다.

그리고 지금 레바논 대통령 선출에 개입하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은 카타르·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 지도자들에게 레바논의 새 대통령 선출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것은 레바논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즉, 레바논 정치 시스템에서 헤즈볼라의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 매튜 밀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헤즈볼라가 레바논에 대해 가지고 있던 지배력과 통제력을 깨뜨리는 것이다.”

미국의 국가 안보 관리들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기회로 보고 있다.



서방은 이스라엘의 확산을 지지하고 있다

“호흐스타인[미국의 중동 특사], 맥거크[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중동·북아프리카 조정관] 등 미국의 고위급 국가 안보 관리들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작전을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말한다. 향후 수년간 중동을 더 나은 방향으로 재편할 때라는 것이다.”(미국의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 9월 30일 자)

1968년 베트남의 벤째 전투에서 “우리는 도시를 구하기 위해 도시를 불태웠다”고 선언한 전투 지휘관의 말처럼

역겨운 제국주의적 언사다.

1968년 땃 공세 때 미군은 베트남을 격퇴하기 위해 인구 7만 5000여 명의 도시 벤째를 폭격해 민간인 528명을 죽이고 주택 5000채를 파괴했다(미군은 328명, 남베트남 정부군은 150명 사망했다).

미국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패배한 뒤 절치부심해 왔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레바논 전쟁을 전력을 보강해 중동에 복귀할 기회로 보며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그 틈에 팔레스타인에서 인종 학살을 격화시킬 자유재량권을 얻었다.

미국이 가자 인종 학살과 이란·레바논 공격 확대를 직접 기획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스라엘을 전폭 지지하면서 미사일과 탄약 등 무기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다.

미국이 자신의 중동 지배력 유지 전략에서 이스라엘에 점점 더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달리 말해, 미국은 자신의 중동 영향력 문제를 이스라엘의 전쟁 성패와 동일시하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서 패배하면 자신에게도 또 다른 전략적 패배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참에 자신들이 과거에 패배한 전쟁들(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2006년 레바논 전쟁)의 악몽을 떨쳐 버리고 싶어 것이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만은 않을 것이다.

전쟁 목표 달성 실패로 광분해
인종학살을 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을 꺾어버리지 못하자 광분해 날뛰며 인종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를 완전히 봉쇄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인 40만 명이 물·식량·의약품 등을 공급받지 못한 채 갇혀 있다. 그중 절반이 어린이로 추정된다.

이스라엘군은 식량 반입을 막고 쉼새 없이 포격하고 있다. 민간인들의 대피소로 사용되는 학교, 난민촌, 병원을 계속 폭격해 수많은 무덤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 북부 베이트 라히아에서 팔레스타인인 최소 87명을 학살했다.

이스라엘의 알아크사 병원 공격 사진은 참혹하다. 이스라엘은 이 병원을 “정밀 타격”(실은 “표적 공격”이다)을 해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환자들을 산 채로 불태워 죽였다.(본지 521호 ‘이스라엘, 가자지구 병원에서 환자를 산 채로 불태우다’를 보시오.)

이스라엘은 가자 북부에서 ‘굶겨 죽이기 작전’을 벌이고 있다. 그 작전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퇴역 장성이자 국가안보위원회 전 위원장인 지오라 에일란드가 제안한 “장군의 계획”이다.

이 작전은 가자 북부에서 하마스 세력을 소탕하기 위한 포위 작전이다. 민간인 소개령을 내린 뒤 떠나지 않은 자는 모두 무장 세력으로 간주해 사살하거나 굶겨 죽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계획에는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분할하고 이스라엘군이 북부 지역을 무기한 통제하면서 하마스가 배제된 새로운 행정 및 통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스라엘 군대가 철수했던 가자 북부에 다시 돌아와 죽음의 씨앗을 뿌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스라엘군은 자체의 인명 피해를 막으려고 로봇에 폭발물을 대거 실어 건물 안으로 보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미쳐 인지하지도 못하는 새에 폭발시키고 있다.

또, 포로가 된 팔레스타인인들을 “인간 방패”로 삼아 지뢰나 부비트랩이 설치돼 있을 만한 곳에 먼저 들여보냈다(〈뉴욕 타임스〉, 10월 14일 자).

서안지구에서는 이스라엘군과 정착자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올리브 수확을 가로막고 살인적인 작전을 펼쳐 팔레스타인인들을 대거 체포하고 있다.



2019년 이스라엘에 배치된 사드 미사일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승인하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레바논·이란에 구축한 세 전선 모두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적·군사적 지원을 늘리고 있다. 헤즈볼라와 이란의 약화, 중동 영향력 강화는 미국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중동 전쟁을 일정 규모 이하로 통제하며 전면전을 피하려고 한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10월 9일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 한 통화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사실상 승인했다.

바이든은 10월 18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언제, 어떻게 보복할지 이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명시적으로 지지했다”고 비난했다.

미국 NBC 방송은 이스라엘이 공격 목표 후보군을 이란의 군사 및 에너지 인프라로 좁혔다고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10월 12일 자). “미국 관리들은 이스라엘이 표적으로 삼은 대상을 좁혔다고 믿고 있으며 그 대상은 군사 및 에너지 인프라라고 설명한다.”

그에 앞서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이

▶ 3면으로 이어짐

이스라엘의 제한된 확전 전황

가자와 레바논의 맹렬한 저항

미국이 이스라엘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미사일 포대와 운용 병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의 경비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서 저항 세력을 군사적으로 제압하지 못하면서 커다란 압력을 받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다.

10월 16일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자 야흐야 신와르를 살해하자 팔레스타인인들은 오히려 저항 의지를 보여 줬다. 알자지라와 인터뷰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신와르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점령에 맞선 저항이 끝났음을 뜻하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이스라엘군이 약 40만 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가둬 놓고 있는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난민촌 인근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육군 소령 3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군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0월 7일 이래 지금까지 사망한 이스라엘 군인은 734명이고, 부상자는 4700명이다.

가자지구를 침공한 지 1년 넘었지만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다.

허점

이스라엘은 9월 23일 이후 레바논을 공격해 레바논인 1500명 이상을 죽였다. 부상자는 4500명이 넘었다.

그러나 레바논 전황은 이스라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은 연거푸 뚫렸다. 앞서 하이파 항구가 로켓 공격에 뚫렸던 데 이어 비냐미나 군 기지도 헤즈볼라의 드론(무인기) 공격으로 이스라엘군 4명이 사망하

고 60명 이상이 다쳤다. 지난해 가자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이 지상전이 아닌 폭격으로 입은 피해 중 최대 규모였다. 헤즈볼라는 “드론이 폐를 지어서” 공격했다고 밝혔다.

다른 곳에서도 이스라엘의 방공망은 허점을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군 요격 미사일이 고갈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 배치 방식과 우선순위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파이낸셜 타임스〉, 10월 15일 자)

한편,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벌이는 지상전은 헤즈볼라의 때복에 걸려 저지되고 있다. 10월 17일 현재 레바논 남부 지상전에서 사망한 이스라엘군은 43명이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 배치된 유엔 평화유지군(UNIFIL: 유니필)에게 철수하라고 촉구했다. 유니필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스라엘은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탱크로 포격하며 유니필의 시설들을 공격했다.

이스라엘은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했다.

유니필 공격 때문에 유럽연합 내 이스라엘 동맹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유니필에 파병한 한국 등 40여 개국도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유엔 평화유지군은 이스라엘 군대의 범죄를 막지 못한다.

유엔 평화유지군은 이스라엘이 1년 동안 가자지구(레바논)에서 학살을 벌일 때도 그랬지만,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 탱크가 자신을 겨냥한 지금도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저항은 결코 죽지 않는다” 10월 18일 요르단의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

균열

그러나 이스라엘의 레바논 확전은 서방 제국주의 진영에 또다시 균열을 내고 있다.

이런 균열은 서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 걸프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시 자국 영공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에 전했다. 또, 미군이 자국 영공 안에서 이란 공격을 막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원유 시설 공격을 막아달라는 뜻도 미국에 전했다.

요르단·이집트 정부도 걱정이 태산이다. 두 독재 정권의 외무장관들은 10월 9일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물론 두 정권이 레바논인들의 고통을 걱정

해서가 아니다. 두 정권 모두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걱정한다.

요르단은 대규모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로 요동치고 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자 야흐야 신와르를 살해한 10월 18일에도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집트 엘시시 정권은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를 혹독하게 탄압하고 있지만, 이집트 사회는 펄펄 끓는 가마솥 같은 상태다.

전쟁 확대를 통해 “전진”하겠다는 이스라엘의 구상은 기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과 미국 등 서방 동맹국들에게 또 다른 막다른 골목 만들어 낼 것이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중동 정권들이 겪는 균열을 자양분 삼아 계속돼야 한다.

▶ 2면에서 이어짐

자국의 핵 시설을 공격하면 핵 교리를 수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이란의 핵 교리는 평화적 목적으로만 핵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돼 있다.

이란 정부 소식통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면 “테헤란은 이에 대응해 이스라엘의 주요 정유 공장 3곳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러시아 국영방송 RT, 10월 10일 자).

며칠 뒤 미국은 이스라엘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미사일 포대와 운용 병력 약 1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란의 추가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사드 배치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이란이 대응해야 할 정도로 매우 포괄적일 것”이라고 미국이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징후다(〈워싱턴 포스트〉, 10월 13일 자).

이 기사에서 미국 육군 예비역 장교인 해리스 만은 적절한 질문을 던졌다. “사드 포대가 배치되고 이스라엘이 미국 방공포병의 보호를 받게 되면 네타냐후가 민감한 목표물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이유가 있을까요?”

네타냐후가 바이든과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국방장관 요아

브 갈란트는 이스라엘의 속내를 드러냈다.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치명적이고 정확하며 무엇보다 놀라운 것이다. … [이란은 다가올 이스라엘의 대응] 결과를 보고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신은 핵 시설과 정유 시설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10월 15일 다음 같은 성명을 냈다. “우리는 미국 정부의 생각을 경청하지만,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적 필요에 근거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언제 이란을 공격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트럼프가 선거한복판에서 “그것[이란 핵 시설]이야말로 타격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가” 하고 목소리를 높인 터라 미국 대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의 고갈되는 방공 요격미사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

바이든은 이스라엘에 “비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네타냐후가 가자지구에 가한 “무자비한 공격”을 레바논으로 확대하는 것을 지지했다. 그리고 이란 공격에 대해서도 청신호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전쟁이 노리는 두 가지 전략적 목표

하마스의 2023년 10월 7일 공격 후 1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도 없고 경계도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스라엘의 두 가지 전략이 부각됐다. 1917년 뵐푸어 선언 이래 이스라엘의 주된 목표는 일관되게 유지돼 왔다. 그것은 팔레스타인에서 인종 청소와 식민 정착민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고, 이제는 레바논 남부도 그 대상이다. 이 목표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지만 이스라엘 팽창주의의 지리적 한계는 여전히 그어지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회의 일부 집단들은 '대이스라엘'이라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 여기에는 레바논, 시리아, 이집트, 요르단 각 영토의 일부와 극단적인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의 일부도 포함된다. 이것이 터무니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시온주의 내에서 이 파벌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전쟁은 전면전이 됐다. 이스라엘은 '다히야 독트린'(저항 세력에 우호적인 지역들을 표적으로 삼는)을 넘어 '가자 독트린'으로 나아갔다. 이것은 사회 인프라, 시민 사회,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종 청소를 하는 것을 뜻한다.

이스라엘이 가진 전략의 둘째 측면은 미국을 더 폭넓은 분쟁, 특히 이란과의 분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 점을 이해하려면 서방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점령에서 재앙적으로 패배했다는 배경에 비춰 봐야 한다. 서방 제국주의의 이 패배로 인해 이스라엘의 야

심찬 도박의 판돈이 더 커졌다. 네타냐후는 서방 강대국들이 실패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 더 광범한 전쟁에 베풀고 있다.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역대 미국 정부들은 더 이상 아랍 세계에서 전쟁과 점령에 휘말리는 것에 갈수록 피로감을 보였다. 바이든이 이스라엘의 행동에 '레드라인'을 설정하려고 하는 까닭이다.

미국의 가장 큰 우려는 이스라엘의 공세에 명확한 종착점이 없다는 점이다. 레바논 침공으로 끝을 알 수 없는 분쟁이 촉발될 수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종파적 분열을 이용해 레바논을 또 다른 유혈 난자한 시대로 몰아넣고 싶어한다. 네타냐후가 레바논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요지는 이렇다. '너희가 서로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 모두를 죽이겠다.'

또 다른 종파 간 분쟁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지만 레바논은 최근 수십 년간 근본적으로 변했다. 더 통합적으로 변했고, 도시화됐고, 아랍의 봄과 2019년 대중 항쟁(10월 혁명)의 경험 모두에서 배웠다.

레바논이 2006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저항 운동과 연대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또한 당시의 패배로부터 배웠다. '가자 독트린'으로 레바논 전체가 이스라엘의 조준경 속에 놓였다. 사회 인프라, 병원, 그리고 종파와 지역을 막론한 민간인들이 지금 공격받고 있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1948년 나크바와 맞먹는 오늘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레바논 학살과 파괴

의 공격으로부터 피신한 시아파 무슬림이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이는 누구나 표적이라고(또는 표적으로 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레바논 남부를 대규모로 폭격할 때 기독교인과 드루즈파 무슬림들의 지역도 함께 공격했는데 이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스라엘, 서방 그리고 골칫덩어리 레바논 지배계급은 이번 전쟁에 많은 것을 걸었다. 레바논은 여전히 위기에 시달리며 제대로 기능하는 정부도 없고 경제도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네타냐후는 자신이 벌인 전쟁이 서방의 개입과 미군의 레바논 점령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목표는 미국 지배층 내 일각에서 점점 더 지지를 얻고 있다. 이라크에서 철수한 이후 미국은 레바논을 아랍 세계 내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한 대비책으로 자리매김시켜 왔다. 베이루트를 내려다보고 있는 신축 미 대사관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자, 미국이 중동에서 벌어지는 저항을 진압하기 위한 활동들의 중추다.

중심축 이동

레바논 전쟁은 제국주의 경쟁과 미국의 "아시아로 중심축 이동"이라는 더 폭넓은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중국의 최대 석유 공급자인 한편, 갈수록 더 많은 중국 자본이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수에즈 운하 주변 공장 지대에 대한 막대한 투자도 그 일부다. 걸린 판돈이 크다.

그런 만큼 저항 세력 문제가 중요해진다. 하산 나스랄라 피살은 커다란 타격이며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아파 무슬림들 사이에서 나스랄라는 이

슬라엘에 대한 저항만을 상징하지 않았다. 나스랄라는 가말 압델 나세르 이래 가장 위대한 아랍 지도자로 여겨졌다. 그의 죽음은 커다란 손실이고 장기적으로 그 결과가 어떨지는 알 수 없다. 단기적으로는 이란이 실질적으로 헤즈볼라 지도부를 장악하고 저항 지휘부를 자신의 통제 아래 중앙집권화했다.

헤즈볼라가 이란과 시리아에 기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은 환상이었음이 입증됐다. 시리아 정권은 부분적으로 헤즈볼라의 개입에 힘입어 2012년 혁명에서 살아남았으면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개선을 더 선호하며 이스라엘에 맞선 전쟁에 참전을 거부했다.

이란은 내부 위기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2022년 벌어진 '여성, 생명, 자유' 시위를 가혹하게 탄압한 뒤 정당성을 크게 잃은 처지다. 이란 정권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재건을 바라고, 제재를 끝내기 위한 서방과의 협상이 재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란에게 레바논인들의 저항은 하나의 협상 카드일 뿐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왕년의 아랍 후원자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팔레스타인인들이 깨달은 것처럼 말이다.

팔레스타인인들과 레바논인들의 저항이 유일하게 의지할 것은 아랍 세계 전역의 변화를 요구하는 광범한 운동, 아랍 정권들과 제국주의를 쏘아버릴 운동이다.

지금의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파괴는 1948년 나크바(대재앙)와 맞먹는다. 나크바라는 재앙은 아랍 세계에서 가장 길고 가장 심오한 혁명의 물결을 촉발했다. 아랍 세계는 그 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다음 혁명의 물결은 더 심오할 것이다.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or.kr/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ws.or.kr/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엔코리아 현재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paper@ws.or.kr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43

성명

하마스 지도자 야흐야 신와르 피살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은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10월 16일 팔레스타인 저항 단체 하마스의 지도자 야흐야 신와르(사진)를 살해했다고 17일(현지 시각) 주장했다. 신와르는 가자지구에서 저항을 이끌며 지난해 10월 7일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핵심 인물로 꼽힌다.

교전 중에 살해된 신와르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저항했다고 한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민족해방 운동 지도자의 죽음을 애도한다.

전 세계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지지하는 많은 이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

한편, 네타냐후는 신와르 살해로 “빛을 갉아냈다”면서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중동 내 세력 관계를 크게 바꿀 때가

지 이번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한 인종 학살을 레바논까지 확대해서 진행 중인 이유다. 이스라엘의 일부 세력은 레바논뿐 아니라, 시리아·이집트·요르단·사우디아라비아로까지 확장하는 ‘대(大)이스라엘’을 꿈꾸고 있다.

그런데도 서방의 지도자들과 친서방 언론은 신와르 살해로 휴전이 가까워진 듯 말한다. 마치 전쟁의 책임이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들에게 있다는 뜻이 말이다.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을 지원해 온 미국은 신와르 살해를 한껏 반겼다. 백악관은 “이스라엘과 미국, 전 세계에 좋은 소식”이라고 입장을 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도 “마침내 전쟁을 끝낼” 기회가 왔다고

반겼다.

유럽연합의 최고 외교관 조셉 보렐은 신와르가 “긴급하게 필요한 휴전과 무조건적인 인질 석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중동 문제연구소’는 그런 생각이 틀렸다고 지적한다.

“그런 생각은 그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하마스와 신와르 탓이라는 전제에 기초해 있다. 네타냐후야말로 합의를 거부한 자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 그런 점에서 조만간 대화 국면이 열릴 것처럼 구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국제 사회’(사실은 서방), 국제 기구의 중재에 기대를 거는 것은 지난 1년간 그랬듯 앞으로도 역량만 낭비하도

록 만들 것이다.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 또한 계속될 것이다. 하마스는 그 창립자 셰이크 아흐메드 야신이 이스라엘에 의해 살해된 이래 지도자들이 순하게 살해됐지만, 매번 새로운 지도부를 세웠다.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인들의 광범한 저항 의지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서방이 주장하듯 평범한 팔레스타인인들과 괴리된 “테러리스트 단체”였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다.

우리는 거리와 학교 등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계속될 저항에 연대하고, 학살 국가 이스라엘에 맞서고, 서방과 한국 정부의 위선을 폭로해야 한다.

10월 18일

노동자연대

호도하거나 기껏해야 동정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 저항은 없는 양하는 매스미디어

한국의 매스미디어를 보면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는 이스라엘군에 의한 수많은 민중의 죽음만 있을 뿐 저항이라는 대안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매스미디어는 대부분 서방 언론과 이스라엘군의 발표(거짓말투성이인 프로파간다)에 편향적으로 의존한다.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서 대중의 지지를 받는 저항 단체이자 정당인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대중과 괴리된 테러 조직에 불과한 양 묘사한다.

가령 KBS, SBS, 〈조선일보〉, 〈경향신문〉 등 많은 매스미디어가 이스라엘의 하마스 지도자 신와르 살해 소식을 보도하며 제목에 “테러리스트” 또는 “도살자 신와르”라고 썼다. 10월 18일 〈연합뉴스〉는 “초라한 최후”라고도 덧 붙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신와르를 살해한

것은 바로 그가 대중적 지지를 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신와르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전단지지를 뿌리며 좌절감을 심어 주려 애쓰고 있겠는가.

또한 신와르의 죽음은 민중의 저항심에 더욱 불을 뭇기고 있다. 알자지라와 인터뷰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저항이 계속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하마스의 저항도 끝나지 않았다.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난민촌 인근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이스라엘군은 손실을 입고 있다.(관련 기사: ‘가자와 레바논의 맹렬한 저항’) 아랍 지역 매체인 〈미들 이스트 아이〉와 인터뷰한 요르단의 정치 분석가 아메르 알-사바일레(국내 언론에도 여러 번 소개됐다)

는 “신와르의 죽음은 가자지구의 전투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매스미디어는 이스라엘군 대변인의 발표는 실어 주면서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이 이스라엘군에 가한 반격, 그로 인해 이스라엘군이 처한 어려움을 보도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예컨대 10월 19일 하마스가 가자지구 북부의 이스라엘 정착촌을 공격하자 10월 20일 YTN은 “하마스 ‘주택 공습에 73명 사망’ ... 이스라엘 ‘과장된 숫자’”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하마스가 수치를 과장했다는 이스라엘군의 발표를 옮기는 보도였다.

여기서 수치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간 해 온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북부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잠재우지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무장 단체들의 반격을 제국주의에 맞선 저항으로서 조명하는 보도는 더욱 찾기 어렵다.

많은 매스미디어가 아래로부터의 저항 대신 유엔 등 ‘국제 사회’ 개입이 대안이라고 말한다. 이스라엘의 유엔 평화유지군 공격 문제 등을 놓고 이스라엘과 미국 등 서방 정부 사이에 벌어지는 이견을 부각하는 것이다.

그런 논조는 (때때로 심한 불협화음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이 벌이는 만행에서 미국 제국주의가 떼려야 뗄 수 없는 핵심 공범임을 흐리는 것이다.(2~3면 참조)

매스미디어가 주는 인상에 휘둘리지 말고, 팔레스타인·레바논 저항을 지지하는 운동에 박차를 가할 때다.

김승주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 띄우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검토하는 한국 정부

우크라이나 정부와 언론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을 보도하자, 한국 정부가 파병설을 기정사실화하고 북한과 러시아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최근 입장을 바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군 파병설 띄우기에 나선 듯하다.

10월 3일 우크라이나의 언론들은 도네츠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러시아군 20여 명 가운데 북한군 6명이 포함됐다고 보도한 데 이어, 러시아군이 북한 병력으로 구성된 3000명 규모의 특별대대를 편성 중이라거나 북한이 러시아에 이미 1만 명을 보냈다는 등 우크라이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잇따라 파병설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의 한 정부 기관은 러시아 연해주 세르게예프스키 훈련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배치에 대비하는 북한 군인들이라며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북한 말투의 한국어가 들린다.

한국 정부와 언론들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을 기정사실화했다.

국가정보원은 10월 18일 북한군 특수부대 1500여 명이 러시아 군함 등을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사실을 정찰위성으로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직후 윤석열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었고, 21일에는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우크라이나 정부가 제시한 파병 ‘증거’들의 진위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제시한 동영상에서 북한 말투의 한국어가 들리지만, 제작 발언자의 입 모양이 촬영되지 않아 음성 편집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넘어가지 말라”는 등의 지시가 들리지만 화면 속 군인들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도 어색하다. 이 때문에 “이 영상은 과거 러시아-라오스 합동훈련이 출처임이 확인됐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나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도 이 영상 속 군인들이 실제 북한군인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이 제시한 위성 사진도 실제 북한군 파병 사실을 입증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미군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신빙



윤석열 정부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을 띄우며 서방 제국주의를 도우려 하고 있다

성을 떨어뜨린다.

이런 탓인지 한국·우크라이나 정부와 달리, 미국 등 서방 정부와 나토 등은 실제로 북한군이 파병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군 파병이 사실이라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말이다.

서방의 주요 언론들도 한국이나 우크라이나의 보도를 전달하고 있을 뿐 파병 사실을 확인했다는 보도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반면, 러시아나 북한 측은 북한군 파병설을 “가짜뉴스”라고 일축하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러시아군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 극동지역에 북한 사람들이 들어온 사실은 확인됐지만, 대부대가 조직되고 있다는 징후는 자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국 언론 MBN도 단독 뉴스로 “입국한 북한 관련 명단을 확인해 본 결과 군인 신분은 없었다”며, “북한군이 투입되



면 30명당 1명꼴로 러시아 통역관이 필요한데 100명에 달하는 통역관을 보내는 건 불가능하다”는 러시아 소식통의 말을 보도했다.

이처럼 한국과 서방 정부, 우크라이나 정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파병설’을 기정사실화하는 까닭은 뭘까?

우크라이나 정부는 서방과 한국 정부의 지원을 더 받아 내고자 하고, 북·러의 관계 개선을 못마땅해 하는 한국 정부도 여기에 맞장구를 치는 것이다.

아시아판 나토

게다가 최근 일본 정부가 제안한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대해 한국 정부는 기본 취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는데, 북한군 파병설은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러시아가 무기 공급을 위해 북한에 의존하는 것은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간 안보가 얼마나 상호 연관돼 있는지를 보여 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들을 보면, 북한인의 러시아 유입은 파병보다는 노동자 파견일 가능성이 높은 듯하다.

지난 6월 19일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조약’을 체결했을 때,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은 예견된 일이었다. 북한의 외화 벌이에서 노동자 해외 송출은 매우 중요하고, 러시아 또한 건설업 등에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한국 정부 산하 연구기관

인 통일연구원은 이미 이렇게 예측했다.

“북한 노동자 파견은 러시아의 대북 경험에서 가장 핵심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국제 통신사 대표들과의 대화에서 북한 노동자 파견을 제재와 무관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러시아는 노동력이 필요하다. 인구와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개발을 위해, 또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은 4개 지역의 전후 재건을 위해 북한 노동자를 활용해야 한다는 러시아 사회 내의 요구가 최근 들어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현승수, ‘푸틴의 평양 방문과 러·북 관계 전망’, 통일연구원)

또,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북한은 노동자 송출 사업을 군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군인의 파견 이더라도 실체는 노동자 파견일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점들은 상황을 과장하려고 애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발언에서도 암시적으로 드러났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의회 발언에서 북한 인력들을 군인으로 특정하지 않고 ‘러시아 공장 대체 인력과 군 인력’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사실들을 한국이나 미국 정부가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파병설에 동조하며 동아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의 제국주의적 갈등에 적극 편승하고 있는 것이다.

강동훈

촛불행동에 대한 경찰 수사 중단하라

〈한겨레〉의 10월 21일 자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윤석열 퇴진 운동을 주도해 온 촛불행동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은 9월 26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핑계로 촛불행동의 회원 관리 업체 서버를 압수수색 하면서 촛불행동 회원 명부를 강제로 압수했었다. 사실상 촛불행동 지도부에 대한 기소로 가는 수순으로 보인다.

이는 눈엣가시인 촛불행동에 대한 탄압 일 뿐 아니라 윤석열 퇴진 운동 전체에 대한 탄압이고, 윤석열이 “반국가 세력에 대한 항전” 운운한 것의 일환이다.

특히, 회원 명부까지 탈취해 탄압에 써먹으려는 것은 운동 참가자들을 위축시키려 하는 것이다.

촛불행동은 특정 정치 강령을 가진 정치 조직이 아니라 윤석열 퇴진 운동을 지지하는 평범한 참가자들이 주로 가입하는 운동체다. 그런 기구의 회원 명부를 수사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야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동안 여권과 경찰은 지속해서 촛불행동의 재정과 모금에 문제가 있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언론에 유포해 왔다. 또한 색깔론 마녀사냥도 펼쳐 왔다.

올해 초에는 국가정보원이 촛불행동

주요 활동가들을 밀착 사찰한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최근엔 촛불행동 집회에 적극 참가해 온 권말선·한성 부부가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계속 정치적 흡집을 내서 운동을 이간시키고, 혹시 모를 국회 내 탄핵 동조도 늘지 않게 압박하려는 것이다. 촛불행동이 국회 탄핵을 집회 요구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촛불행동이나 퇴진 운동 비방에 대해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총선 때 탄핵을 금방이라도 추진할 것처럼 하더니 말이다.

민주당은 얼마 전 국회 안에서 촛불행동이 주최한 ‘탄핵의 밤’이 반헌법 운운하는 공개 비방을 당할 때도 자신들의 당론은 탄핵이 아니라며 쏙 빠져나갔다.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인데도 말이다.

아직 퇴진 운동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은데도 정부가 신경질적으로 나오는 것은 운동이 더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고, 반동적 개악 공세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민주당에 의존하지 말고, 촛불행동을 방어하며 대정부 투쟁을 키워야 한다.

김문성



촛불행동은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윤석열 퇴진 집회를 매주 열어 왔다

속보! 〈자주시보〉 대표·기자들 압수수색 진행 중

이 기사를 넘길 즈음, 이번에는 반미자주를 표방해 온 좌파 언론 〈자주시보〉의 대표와 전현직 기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다. 반정부 좌파에 대한 윤석열의 정치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청주 보안법 재판 3인 항소심 선고 형량은 줄었지만, 여전히 마녀사냥이다

10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청주 평화운동가 3인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졌다. 박응용·윤태영 씨에게는 각 징역 5년, 손종표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앞서 지난 2월 1심 선고에서 박응용 등 3인은 무려 징역 12년이라는 터무니없는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들을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사실상의 간첩이라고 부당하게 찍은 것이다.

그러나 3인의 평화운동가들은 F-35 배치 반대 서명 운동 등 대중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운동을 벌였다.

심지어 1심 재판부는 보안법 사건에서는 처음으로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해 중형 연도의 근거로 삼았다. 검찰은 1심 선고 직전에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추가했다. 형량을 늘려 정치적 충격을 키우는 것이 검찰의 의도였

고, 1심 재판부는 중형 선고로 화답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재판부(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3인의 형량을 낮췄다.

“형량이 감형된 배경에는 범죄단체 조직죄가 무죄로 뒤집힌 점이 크게 작용”했다(〈연합뉴스〉 10월 21일 자). 재판부는 범죄단체 조직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범죄단체조직죄’ 기소가 애당초 터무니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도 보안법 위반의 핵심 혐의들에 유죄를 선고했다. 박응용 씨 등 평화운동가들의 활동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게다가 1심 재판부가 무죄라고 본 보안법 6조 ‘잠입·탈출’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보안법 6조 ‘잠입·탈출’은 “반국가단체[북한의 지배하에 있

는 지역]에서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것이다. 과거부터 남북 어부나 방북 인사들을 억울하게 간첩으로 만든 조항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북한을 다녀온 적도 없는 청주 활동가들에게 이 조항을 적용했다. 북한이 아닌 제3국에서 북한 기관원을 만나도 ‘잠입·탈출’이라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교류를 위해 1인 시위, 서명 운동 등 평화적인 방식으로 실천해 온 사람들에게 징역 5년 선고도 터무니없는 마녀사냥이다. 청주 활동가들은 타인을 해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준 적도 없는 사람들이다.

평화운동가 3인 중 박응용 씨는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어 언제 다시 병세가 악화될지 모른다. 선고 직후 그의 아들 박인해 씨는 “아버지 병세를 생각하면 앞으로 4년 넘게 감옥에 있다는 것

은 말도 안 된다. 꼭 상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청주 평화운동가 3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또한 같은 사건으로 항소심을 따로 받는 박승실 씨에게도 무죄가 내려져야 한다.

비록 북한 관료는 (지배 계급이어서) 남한 좌파가 연대할 대상이 아니지만, 누군가 정치적 신념에 따라 북한 정부 인사들과 교류했다면 이는 그의 사상을 나뉘므로 일관되게 실천했다고 봐야 한다.

정치적 오류로 여겨지더라도, 그 정치적 신념을 평화적 방식으로 실천하려 했다면 이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로 온전히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김영익

민중민주당과 반미 자주 활동가 권말선·한성 부부 압수수색, 청주 평화 활동가들 중형 선고...

국가보안법은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이재혁

최근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주된 타깃은 윤석열 정부의 친서방(미·일) 노선에 반대하거나 윤석열 탄핵 촛불 등 반윤석열 투쟁에 나서고 있는 반미자주파 활동가들이다.

10월 22일 〈자주시보〉 김병길 대표와 전현직 기자들이, 9월 11일 권말선 시인과 한성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공동대표 부부가, 8월 민중민주당이, 4월에는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올해 2월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 활동가 3명에게 1심에서 무려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회합·통신 등 보안법 위반 혐의에는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해에도 창원과 제주 등지의 전직 민주노총 간부들이 구속됐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은 심화하는 지정학적 긴장과 정권의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서방 제국주의 지지 노선과 극우 노선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보안법을 휘둘러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공격하고 속죄양을 찾으려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보안법 공격으로 반제국주의 운동과 반정부 운동을 위축·분열시키려 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대한민국 건국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과 독일의 사회주의단속법을 모델로 만들어졌다.

보안법은 대한민국 국가의 탄생과 동시에 만들어졌다.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인 민법과 형법보다도 먼저 제정됐다.

미국은 한반도 남쪽에 친미 국가를 세워 냉전 전초 기지로 삼으려 했다. 이승만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권력을 잡았다.

미국 제국주의에 기대어 한국 국가를 수립하려는 시도는 분단과 제국주의에 맞서는 저항에 직면했다. 여순 반란, 제주 4.3 항쟁이 대표적이다.

남한 지배자들은 신생 국가를 세우기 위해 대중 저항을 짓밟아야 했다. 그래서 그토록 신속히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던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운동을 위축·분열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에 맞서야 한다

건국 이듬해인 1949년에 보안법 사건이 4만 6000건 넘게 벌어졌고, 약 12만 명이 검거돼 수감됐다. 1949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기소 사건의 80퍼센트가 국가보안법 사건이었다.

보안법은 1960년 4월혁명 이후 잠시 잠잠했다가 박정희 집권 이후 다시 맹위를 떨쳤다. 군부 독재 시기 내내 보안법·반공법을 이용한 탄압이 술하게 벌어졌다.

전두환을 끌어내린 뒤로도 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은 계속됐다. 오히려 노태우 때는 전두환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1987년 6월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계급 대중의 투쟁이 더 커지지 않도록 억누르기 위해서였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이 끝나도 보안법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동구권 붕괴라는 국제 정세에 맞게 보안법이 개정됐다. 특히 제7조에서 “국의 공산 계열에 동조”라는 문구를 삭제



보안법 마녀사냥 피해자 송두울 교수

제하고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정부나 체제를 비판하는 ‘내부의 적’을 겨냥하겠다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한 것이다.

독재에 맞선 야당 정치인이었던 김영삼도 집권하고 나서 보안법을 무기로 휘둘렀다.

김영삼은 1994년 “자신은 과거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피해자로서 이 법이 인권 억압에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 법은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1017명이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김대중은 김영삼보다 한술 더 떴다. 김대중도 그 자신이 보안법의 피해자였지만, 김대중 정부 첫해에만 400명 넘는 사람들이 구속됐다. 임기 초 구속자 수는 독재 정권들 못지않았다.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1164명이 구속됐는데, 3일에 2명꼴로 잡혀간 것이다. 당시 ‘국제사회주의자들’은 북한 국가를 전혀 지지하지도 않았는데도 단일 조직으로서는 구속자 수가 최대였다.

김대중 정부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보안법으로 탄압한 배경에는 IMF 경제 위기가 있었다. 김대중은 정부와 기업주들의 고통 전가에 맞선 노동자 투쟁을 억누르기 위해 보안법을 적극 이용했다.

그리고 김대중은 우파와 군부 등 이 나라 핵심 권력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했다.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음을 보여 주려는 것이었다.

물론 김대중은 좌파와 사회운동의 염

원을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보안법을 개정하겠다는 얘기는 했지만, 보안법 폐지에는 단호히 반대했다. 그나마도 개정하더라도 형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군부와 우파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노무현 정부 때는 보안법 구속자 수가 세 자릿수로 줄었다. 그러나 보안법 구속자 수가 줄어든 것은 친북 좌파나 혁명적 좌파가 그만큼 줄어든 것을 반영하는 것이지 노무현 덕분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재독 학자 송두울 교수가 보안법 마녀사냥을 당한 것이 노무현 임기 첫해였다. 당시 언론들은 “희대의 간첩 사건”이라고 떠들었는데, 실제로는 노무현 정부의 위선을 보여 준 희대의 마녀사냥이었다.(관련 기사 본지 450호 ‘국가보안법 탄압과 사상의 자유: 20년 전 송두울 교수 마녀사냥을 돌아보며’)

그 이듬해 노무현은 위선적이게도 “국가보안법은 독재 시대의 낡은 유물.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이라크 전쟁에 한국 군을 파병한 일을 무마하기 위해 반전 평화 운동을 무마하려는 속임수였다. 애석하게도 많은 자민통계 활동가들이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 보안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보안법 개정안은 국회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반대 투쟁과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 국면에서 속죄양을 찾기 위해 보안법으로 민주노동당 활동가들을 공격해 민주노동당 분열을 조장했다(‘일심회’ 사건). 심상정 등 민주노동당 내 PD계는 보안법 탄압 피해자들을 방어하기는커녕 비난



박근혜의 '통신·회합'은 처벌받지 않았다

하고 심지어 내쫓으려고까지 했다.(이게 실패하자 그들 자신이 나갔다.)

이처럼 독재 정부가 막을 내린 이후로도, 민주당 정부들하에서도 보안법 탄압이 벌어져 왔다는 것을 꼭 알아야만 한다.

친북 사상만 처벌하는 게 아니다

보안법은 국가의 자의적 잣대로 생각과 말을 처벌하는 법이다. 구체적 폭력 행위가 없어도 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특정 민중가요를 불렀다는 이유로, SNS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 악랄한 법이다.

지금도 방첩사령부나 국정원은 북한 매체들을 살살이 살핀다. 그런데 만일 좌파 학자나 활동가가 학문적·정치적 관심으로 북한 매체나 출판물을 본다면 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

또한 보안법은 계급 차별적인 법으로, 지배자들의 역겨운 이중잣대를 드러낸다.

지난 수십 년간 많은 남한 지배계급 인사들이 휴전선을 넘어 북한에 가서 북한 관료들과 환담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만났다. 그러나 그들은 보안법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반면 1990년대 초 남북 자유 왕래를 외쳤던 통일 운동가들은 처벌받았다. 북에 남은 가족들에게 연락하려는 탈북민들도 보안법으로 처벌받는다.

이런 이중잣대는 신념을 단속하는 법의 특징이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지적했다. “[신념단속법은] 분리의 법률이

며, 분리의 법률은 죄다 반동적이다. 그것은 결코 법률이 아니며 하나의 특권이다. 어떤 사람이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을 다른 사람은 행해도 좋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 그의 선량한 생각과 그의 신념이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보안법은 탈북민 억압의 도구이기도 하다. 많은 탈북민들이 “잠재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로 취급당하며 감시받으며 지내야 한다. 일부 탈북민이 반공 안보 선전을 열심히 하는 이유에는 ‘잠재적 보안법 위반 혐의자’ 취급을 받지 않으려는 것도 있다.

보안법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 하나는 친북 사상만 처벌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연구의 우익적 권위자인 ‘미스터 국가보안법’ 황교안은 1991년 보안법 개정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개정 전에는 반국가단체의 개념에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도 반국가단체로 본다고 규정했으나 이러한 공산계열 반국가단체와 비공산계열 반국가단체를 구분할 실익이 전혀 없다는 지적에 따라 1991년개정 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즉, 북한·중국·옛 소련 체제에 비판적인 좌파도 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사회주의자들, 사노련, 해방연대,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씨 등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좌파들도 보안법으로 탄압받았다.

한편, 보안법은 정부와 지배계급에 맞선 운동을 위축·분열·고립시키는 데 이용된다. 윤석열 정부가 반미자주

파 활동가들을 속죄양 삼아 마녀사냥을 벌이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최근 보안법 탄압의 주된 양상은 반미자주파 활동가들을 ‘회합·통신’ 조항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이다. 검찰과 우파 언론은 석권호 씨 등 전직 민주노총 활동가 4인이나 청주 평화활동가 등이 북한 관료를 접촉한 간첩이라며 마녀사냥을 벌였다.

유감스럽게도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같은 자민통계인 진보당에서도 피해자들을 공공연하게 방어하려 나서지 않았다. 다른 한편, PD계 일각은 보안법 탄압에 반대한다면서도 북한과 연계된 간첩 행위는 방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안법에 반대한다는 것은 사상의 자유를 방어한다는 것이다. 사상의 자유를 지지한다면 당연히 사상을 표현할 자유도 지지해야 한다(김대중은 억지자들을 분리시켰지만 말이다). 정치 사상의 경우 그것을 그저 자기 머릿속에만 갖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사상을 실천으로도 옮긴다면 북한 국가 관료나 조선노동당을 접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물론 북한 관료는 남한 노동운동과 좌파가 연대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그 오류는 운동 내에서 토론과 논쟁으로 해결할 일이지 국가가 공권력을 들이대는 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

그리고 본디 마녀사냥은 광범한 사람들에게 지지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벌어진다. 그래야 위축·분열·고립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보안법 탄압 피해자들을 수상쩍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곤 한다.

송두율 교수 마녀사냥도 그랬다. 검찰, 국정원, 우파 언론은 송 교수가 조선노동당에 입당했었다는 사실을 내세웠다. 그러자 진보 진영이 분열했고, 일부는 송 교수에게 전향과 반성까지 요구했다.

그러나 누군가 사상을 이유로 탄압받을 때 그를 방어하지 않는다면, 그다음에는 나 자신이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마르틴 니컬러의 유명한 시를 기억해야 한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니까. 다음에 그들은 유대인을 잡으러 왔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 그 다음에 나치는 나를 잡으러 왔다. 그때 나를 위

해 말해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보안법은 조건 없이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특히, 집권 전 김대중) 형법상 내란죄 등이 보안법을 대체할 수 있으니 보안법을 폐지해도 된다고 주장한다.

개정이 아니라 완전 폐지

그러나 이는 사상 탄압 논리를 수용하는 것으로, 이는 보안법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게 되거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단속할 대체 법률 제정으로 나아가게 된다.

1989년 김대중의 평민당은 민주질서보호법을 대체 법안으로 내놓았는데, 국가보안법 7조와 비슷한 민주질서위해죄가 포함돼 있었다.

최근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내 개혁주의자들이 보안법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주장한다. 특히, 7조만 폐지 또는 개정을 주장한다. 보안법의 핵심 조항들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들로 가득한데도 말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은 30년이 지나가는 동안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에서 ‘7조 폐지’로, 7조 폐지에서 또 ‘7조 일부 개정’으로 점점 후퇴해 왔다.

이런 후퇴는 운동이 개혁주의적이 되고/되거나 민주당과 공조하는 과정 속에서 진행돼 왔다. 민주당은 집권 시절 이든 야당 시절이든 보안법에 제대로 맞서지 않는다는 사실이 거듭 입증됐는데도 말이다.

애초 제정된 목적 자체가 신념에 대한 단속과 억압인 보안법은 본질적으로 반민주적이어서 손질해서 쓸 수 없고 통째로 없애 버려야 한다.

일각에서는 보안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의 권위에 기대어 보안법을 폐지하려 한다.

물론 보안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여러 민주적 권리를 공격하는 ‘헌법 위의 법’이다.

그러나 헌법 자체에 국가보안법의 존재 근거가 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 안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다면 헌법상 권리를 제약할 수 있게 한다.

마르크스는 일찍이 자본주의 국가의

▶ 10면으로 이어짐

얼마나 썩어빠졌길래 정치 브로커가 흔들어 대나

명태균 스캔들이 여권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사퇴 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시점부터 최근까지 전문 선거 브로커 명태균이 김건희를 매개로 핵심 참모 구실을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의 핵심 측근으로는 “윤핵관”으로 불려 온 정치인과 검찰 출신자 중심의 관료, 그리고 뉴라이트 지식인들이 꼽혀 왔다.

그런데 명태균이 튀어나온 것이다. 이 스캔들은 김건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명태균은 서울 시장 오세훈, 대구시장 홍준표 등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에게도 도움을 줬다며 폭로 협박을 하고 있다.

(22일 폭로된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 27명 중에는 야당 정치인 3명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 현역 의원인 김두관·이언주, 정의당 여영국 전 의원이 그들이다. 여영국 전 의원은 대학 동기인 명태균에게 비공개 여론조사를 한 차례 맡겼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명태균 스캔들을 키운 것이 친여 매체인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인 것도 시사적이다. 이 매체들은 명태균 단독 인터뷰를 수차례 보도해 스캔들을 키웠다.

이들의 타깃은 김건희의 국정과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다. 이참에 김건희 수사를 허용해 지지율 위기에서 탈출해야 지지부진한 개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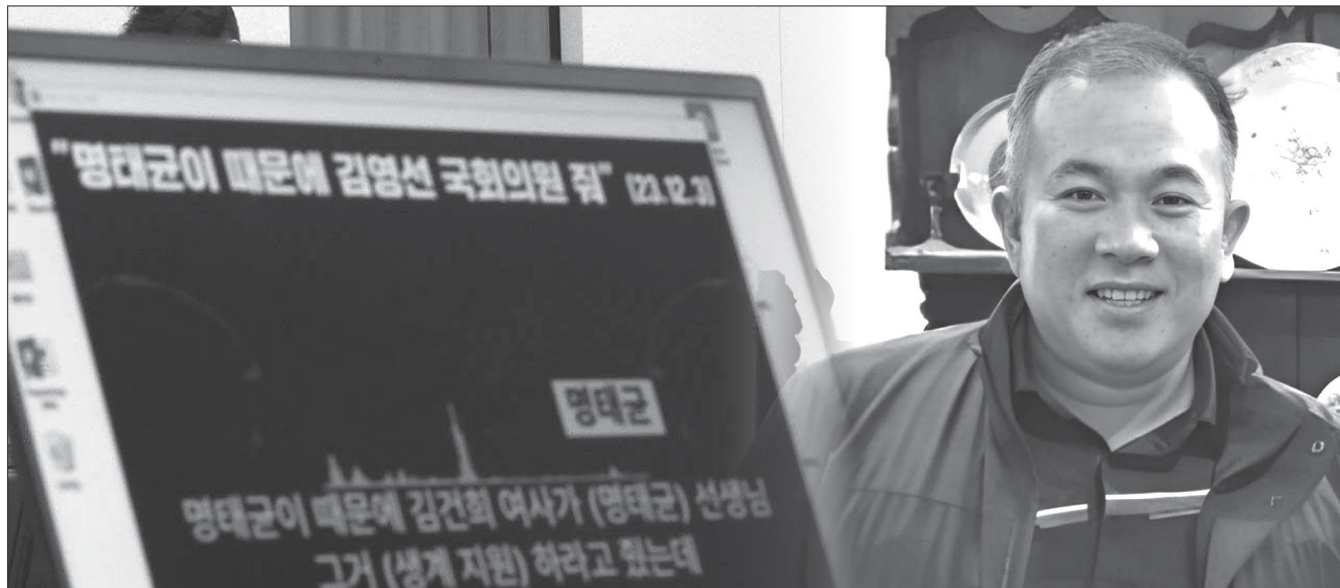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은 껌싸게 이를 이용해 자신의 여권 내 입지를 강화하려고 한다.

이번 스캔들은 검·경이 감싸 준 여러 김건희 부패 의혹의 최신 사례다.

김건희 소유 회사 코바나의 특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명품백 의혹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명태균 스캔들은 여권 핵심부의 유치한 실체를 보여 준다.

이런 추문은 지배계급 자신에게 망신



명태균 스캔들은 윤석열에게 권좌를 맡긴 지배계급에게도 망신스러운 일이지만, 그들은 윤석열 정부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고 있다

이 되는 악재다. 이런 윤석열 세력을 영입해 권좌를 맡긴 것은 한국 지배계급 자신이다. 이같이 지배계급 정치의 위기와 초라함을 보여 주는 일도 흔치 않을 듯하다.

버티기

윤석열은 밀리면 무너진다는 각오로 버티는 듯하다. 내놓을 수 있는 대안도 기껏해야 김건희의 대외 활동 자제 수준일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로 민심을 달래기 어려울 것이다.

반윤석열 진영은 2016년 중앙일보사 계열사인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PC를 폭로해서 “비선 실세” 의혹이 대중을 공분시킨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물론 이런 악재는 정권 반대파에게 기회다.

그럼에도 윤석열이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필요한 만큼 반정부 투쟁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운동과 좌파 측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윤석열의 위기를 이용해 대중적인 투쟁을 전진시키지 않고/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배계급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고 있다.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지지하기 창피한 정권이지만 달리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흔들리지 않고 기업주들을 위한 개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믿어 보는 듯하다.

민주당은 지배계급의 압력을 받아 부자 감세, 국민연금 개악 등에 협조할 태세를 보이며 오히려 반윤석열 정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총선 때는 윤석열 탄핵에 나설 것처럼 넌지시 암시하더니, 지금은 시기상조론을 펴며 운동이 민주당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총선에서는 반사이익을 얻었지만 문재인 정부 때 생긴 민주당에 대한 대중의 환멸감이 다 사라진 것도 아니다. 최근 재·보선에서 양당이 각자의 기존 지역구를 지키는 현상 유지 결과가 나온 것은 민주당 지지층에 아직 추가적 보탬이 일어나진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하락해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는 거의 비슷하다.

이명박, 박근혜 때를 돌아봐도 대중 투쟁이 지지율 위기 심화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대선에 이어 총선까지 압승한 이명박은 총선 한 달 만에 청소년·청년들이 주동이 된 촛불 시위가 터져 나오면서 순식간에 지지율이 한자릿수까지 추락했다.

우파를 총결집시켜 집권한 박근혜의 첫 지지율 위기는 임기 첫해(2013년)

말 철도노조 파업 때 찾아왔다.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의 시작점은 노동자 투쟁이었다. 그중 직접적 도화선은 2016년 철도노조 73일 파업이 중심에 있었던 공공부문 파업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노동자 경제 투쟁이나 노동계급 정치 투쟁의 전선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다.

사실 지배계급 내의 우스꽝스런 실체가 폭로된 것만으로는 자동으로 대중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래로부터 대중 투쟁이 성장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윤석열 정권은 위기와 함께 살아갈 수 있고, 그 와중에도 반동적 개악 공세를 벌일 것이다.

박근혜도 노동자 투쟁이 도화선이 돼 범국민적인 퇴진 운동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십상시 논란, 세월호 참사 항의 등의 위기와 함께 동행할 수 있었다.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가 불러온 위기 속에서도 기운을 차려 공무원 연금 개악에 성공했다.

지금은 윤석열의 위기를 이용해 계급투쟁을 건설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그래야 여름 이후 극우화를 재개하며 반동적 개악 공세를 예고한 윤석열을 진짜 그로기로 몰 수 있다.

김문성

▶ 9면에서 이어짐

헌법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일반 조항 속에서 나타난 자유와 유보 조항 속에 기록된 자유의 폐기가 공존한다. 헌법의 조항들은 그 자체에 반대 명제를 담고 있다.”(《루이 보나파르트 브뤼메르 18일》)

헌법 37조 2항처럼 보안법에도 모호

한 표현이 가득하다. 이런 모호함은 국가가 자의적으로 사상 표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게 해 준다. 사상 단속 법률이라는 것 자체가 모호할 수밖에 없다.

보안법은 (일제하 치안유지법은 차치하고라도) 한국 국가의 역사 내내 존재해 온, 한국 지배계급에게 매우 유용한 무기다. 지배계급과 우익은 보안법 폐

지는 물론이고 개정조차 한사코 막을 것이(고 민주당도 그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계급 대중의 저항으로 체제가 바야흐로 전복될지 모른다는 위협을 느낄 때에야 비로소 국가는 보안법이라는 무기를 잠시 내려놓을 것이다.(그러나 이내 재사용할 것이다.)

체제의 위기와 양극화가 점점 심화하는 상황에서 보안법 공격이 더 많아질 수 있다. 게다가 민주적 권리에 대한 공격과 속죄양 찾기는 근래에 국제적 현상이기도 하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 탄압에 일관되게 반대하며 모든 보안법 피해자들을 무조건 방어해야 한다.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생활고 외면, 인종학살 지원하는 해리스 vs. 반사이익 얻는 트럼프

11월 5일(화) 미국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와 트럼프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이어가면서, 해리스와 민주당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경합주에서 해리스 지지율이 트럼프보다 낮다는 것이 한 이유다. 간선으로 치러지는 미국 선거에서는 총득표에서 뒤져도 경합주 선거인단을 잘 확보하면 당선할 수 있다(2000년 대선 때 공화당 후보 조지 W 부시가 그렇게 당선했다).

다른 이유는, 민주당 표밭으로 여겨진 흑인과 저소득층에서 해리스 지지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흑인들의 해리스 지지율은, 2020년 대선 때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의 주요 요구 모두를 대놓고 반대했던 바이든보다도 10퍼센트포인트 이상 낮다(뉴욕 타임스). 소득 중·하위층에서 해리스 지지율은 트럼프보다 0.6~4.6퍼센트포인트 낮다(유고브).

생계비 위기로 인한 대중의 분노가 크기 때문이다.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과 해리스는 서민 구제를 약속했지만, 그 구제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에 불과했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과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물가가 급등해 서민 생계비 위기가 극심해졌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사회(연준)이 물가 급등을 잡겠다고 금리를 인상하면서 가계 부채가 치솟았다.

천대받는 흑인(등 유색인종)의 생활고는 특히 심하다. 흑인 등록 유권자의 4분의 3이 생활고가 심각해 식료품 구입까지 줄여야 했다(뉴욕 타임스). 유권자 등록도 하지 못한 흑인 극빈층을 포함하면 실제 상황은 훨씬 심각할 것이다.

미국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단체 '팔레스타인청년운동'은 이렇게 질타했다.
“학살 지원 입장을 한 번도 바꾼 적 없는 해리스에게 투표하라고 하지 마라. 해리스가 차악이라고 하지 마라.”



해리스는 트럼프 귀환의 길을 닦은 민주당의 실패한 정책들을 옹호한다

그런데도 이번 선거에서 해리스가 내놓는 경제 공약의 골자는 기업 지원이고, '밥상 물가' 대책에는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다.

민주당을 향한 시선이 차가운 것도 당연지사다. 미국 싱크탱크 노동정책센터(CWCP)의 10월 2일 자 여론조사를 보면, “최근 불공정하게 일자리를 잃었다,” “일자리가 매우/다소 불안정하다”고 응답한 사람 중 해리스에게 투표하겠다는 사람은 각각 37.4퍼센트, 32.6퍼센트에 불과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런 분노를 이용하기 위해, 이민자를 속죄양 삼는 거짓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애완건을 잡아먹는다”는 등의 역겨운 악선동을 토해 낸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단속·추방을 제1 공약으로 내세운다.

이민 문제를 부각함으로써 트럼프는 핵심 기반인 인종차별적 극우를 규합·강화하고, 권력층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뒤틀어 극우보다 훨씬 광범한 유권자층을 지지 표로 모으고 있다.(이는 국제적 흐름의 일부다. 오늘날 유럽에서도 극우·파시스트가 이민 문제를 초점으로 삼아 부상했고 곳곳에서 전진하고 있다.)

민주당 정부에 분노해 트럼프에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모두 극우는 아니

다. 그럼에도 그 중심축 구실을 하는 극우 운동은 트럼프가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자신들의 세를 더 키울 기회를 얻고 있다.

학살 공범

하지만 해리스와 민주당은 그런 극우를 저지할 방법이 못 된다. 애시당초 경제 위기의 고통을 서민들에게 전가한 민주당과 기성 권력층에게 트럼프 부상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관련 기사 본지 514호 '민주당은 어떻게 트럼프 복귀의 길을 닦았나')

그런데도 해리스와 민주당은 진보 성향 유권자가 자신을 찍지 않으면 트럼프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비방한다.

민주당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미국 흑인들이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이 남성이 돼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고,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해리스는 자신이 여성이므로 자신에게 투표하는 것은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신중지권 옹호 여론(69퍼센트)과 해리스 지지(47퍼센트) 사이에는 커다란 격차가 있다(카이저가족재단(KFF) 조사). 이는 해리스가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등 우익의 임신중지권 공격에 맞선 방벽을 자처하면서도, 실질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 바이

든·해리스 자신이 임신중지권이 헌법적 권리로 보장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행정명령을 발표해 긴급한 지원을 하겠다고 공약했는데도 말이다.

조급해진 민주당은 “[녹색당 후보] 질 스타인에게 투표하는 것은 트럼프에게 투표하는 것”이라고 비방하는 선거 광고를 내놓았다. 전국 후보도 아니고 1퍼센트에 불과한 스타인의 표를 빼앗아 오지 않으면 트럼프에게 질까 봐서다.

민주당은 이스라엘 무기 지원 중단을 공약하는 스타인이 해리스를 비방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해리스는 실제로 인종 학살을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해리스를 “살인마 카멀라”라고 규탄하는 것이다.

해리스는 바이든의 최측근으로서 가자 전쟁 내내 이스라엘을 지원해 왔다. 10월 7일 1주기에 맞춰 낸 성명에서도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충실히 도울 것”을 재확인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 지도자 야흐야 신와르를 죽인 후에 해리스는 “신와르를 죽여 장애물을 제거”했다며 환영했다. 마치 인종 학살범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항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평화의 걸림돌인 양 말이다!

이에 미국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내 주요 단체인 '팔레스타인청년운동(PYM)'은 이렇게 질타했다. “학살 지원 입장을 한 번도 바꾼 적 없는 해리스에게 투표하라고 하지 마라. 해리스가 차악이라고 하지 마라. 우리의 헌신과 믿음이 향하는 곳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뿐이다.”

이들을 포함한 미국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10월 7일 1주년을 기해 미국 50여 개 도시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런 아래로부터 항의가 계속 전진해야 한다. 미국에서 그런 저항의 가능성은 물류를 마비시켜 통쾌한 승리를 거둔 미국 동부 항만 노동자 파업에서도 엿보였다.

이런 아래로부터의 항의가 강화될 때만, 11월 5일에 누가 당선하든 이후에도 계속될 위기에서 노동자 서민을 위한 진정한 대안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을 것이다.

백인과 흑인, 선진국 국민과 저개발국 국민, 남성과 여성.....

우리는 각종 특권으로 분리돼 있나?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의 집회에 참가하는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서구에서 온 일부 사람들이 “나는 백인(혹은 미국인) 특권을 가졌지만” 하고 말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겸양법은 그들이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사람들이 겪는 불균등한 경험을 알고 있고, 팔레스타인인들과 온전한 일체감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한다.

하지만 정체성 정치의 ‘특권’론은 단순히 흑인·아시아인이 백인보다 차별받고, 저개발국 사람들이 선진국 사람들보다 평균적인 생활 조건이 나쁘다는 현실을 지적하는 것을 넘는 합의가 있다.

‘특권’론은 차별이 그 차별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을 통해 작동하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도 백인, 남성, 이성애자, 선진국 국민은 소수 인종, 여성, 동성애자, 저개발국 사람들에 대한 차별에서 이득을 얻고 따라서 그러한 차별을 유지하는 것이 득이 된다고 본다.

팔연사 지지자인 독일인 학생에 따르면, 독일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안에는 유색인종이나 이민자에 비해 백인의 참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두고 백인이 ‘독일 국가의 이스라엘 지원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차별받지 않는 것이 곧 특권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또, 이스라엘을 후원하는 자국 정부에 항의하는 운동의 참가자는 물론이고 서구의 평범한 노동계급 백인들은 인종차별과 팔레스타인 인종학살에서 이익을 얻지 않는다. 책임을 공유하는 공모 집단도 아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특권론은 지난 30여년간 영미의 학자, 연구자, 작가, 다양성 트레이너 등 속에서 영향력이 커져왔다.

한국에서도 특권론은 비교적 널리 수용된다. 상당한 인기를 누린 《선량한 차별주의자》(김지혜, 창비, 2019)도, ‘인식하지 못한 채 평범한 개인에게 부여되는 특권이 타인의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특권론이 널리 수용되는 것은 마치 현실의 단면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미국·영국 노동자는 물론 한국 노동자보다 낮다. 또, 경찰은 백인보다 흑인과 유색인종에게 더 가혹하게 군다. 또, 육아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다양한 참가자들은 특권으로 분리돼 있지 않다

의 주된 책임은 보통 엄마에게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사물의 외관과 본질이 일치한다면 과학은 불필요할 것이다. 쟁점은 차별 현상이 아니라 저개발국 사람들의 빈곤과 서구인들이 누리는 상대적으로 나은 생활 조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느냐는 점이다.

자본주의는 태생부터 불균등하게 발전했고, 언제나 지역마다 생활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그 차이는 형편이 더 나은 지역 사람들의 ‘특권’이 효과를 낸 결과가 아니다. 자본이 (그 본성상) 가장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즉, 자본 축적 수준이 높고, 인프라와 금융이 발달했고, 숙련 노동자가 있는 곳(선진국) 말이다.

서구 나라가 저개발국을 (일방적·체계적으로) 수탈한다는 것은 참말이 아니다.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은 수탈은커녕 오히려 투자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최빈국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중국은 세계 자본주의와 통합돼 최빈국에서 ‘G2’ 국가로 성장했다. 남한도 비슷한 방식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룬 나라다.

더 중요한 점은, 심지어 19세기 제국주의의 식민 점령·수탈 속에서도 결코 식민 모국의 노동계급이 그 이득을 얻

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일제 시기는 조선 민중뿐 아니라 일본 노동자 대부분에게도 생지옥이었다. “제국주의 전쟁 아래에서 일본인 노동자들 또한 가혹한 전시 노동으로 희생됐기 때문이다.”(일본인 사회주의자 하세가와 사오리)

이득?

‘남성 특권’, ‘백인 특권’, ‘이성에 특권’ 등의 개념에 따르면, ‘특권’은 태어나면 서부터 부여되거나 개인의 특성에서 비롯한다. 하지만 특권론자들은 왜 남성, 백인, 이성애자에게 그 ‘특권’이 부여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는 모든 차별에는 역사적 기원과 사회적 근원이 있다고 본다.

예컨대 인종차별은 자본주의 초기의 노예 노동을 정당화하려고 17~18세기에 처음 개발됐고, 노예제가 폐지된 오늘날에도 형태를 달리해(오늘날 가장 유력한 인종차별 형태는 무슬림 혐오다) 계속되고 있다.

인종차별은 노동계급을 분열시켜 효과적으로 착취하고, 사람들의 고통과 불만을 체제가 아닌 딴 곳으로 돌리는

데 이용돼, 체계적으로 부추겨진다.

즉, 인종차별에서 진정 이득을 보는 것은 이 체제의 수혜자들과 수호자들이다.

사회학자 알버트 시만스키의 유명한 연구 결과는 백인이 인종차별에서 득을 보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보여 줬다. 시만스키는 미국 50개 주를 관찰해, 백인과 흑인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가 클수록 백인 노동자의 형편이 나쁘다는 사실을 밝혀 냈다.

일반적으로 말해 차별은 노동계급이 단결해서 더 효과적인 계급투쟁을 벌일 가능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백인과 흑인, 남성과 여성 등 노동자 모두에게 해롭다.

따라서 백인 노동자와 흑인 노동자가 차별과 착취를 낳는 체제에 맞서 함께 싸울 단일한 이해관계가 있다. 이것은 단결과 연대의 단단한 토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특권론은 차별을 개인들 간의 상대적인 관계에서 찾기 때문에, 단결이 아니라 분열을 부추기고, 차별의 근원과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특권론자가 내놓는 ‘해결책’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특권을 억제하라고 권고하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스스로의 ‘특권’을 인식하고, 자신의 ‘특권’을 거슬러 차별받는 당사자의 운동을 부차적 위치에서 지지·후원하는 것이다(가령 앨라이로). 단일한 이해관계 속에서 함께 싸울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다.

다양한 국적과 배경의 사람들이 참가하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서 피부색, 성별, 종교, 국적 등에 따라 서로가 서로에 대한 특권과 차별로 얽혀 있다고 생각한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혹은 정반대로 억울함, 질시, 노여움을 느끼게 될 수 있다.

특권론은 운동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단단하게 연대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운동의 전술과 전략 등에서 존재하는 차이에 대한 정치적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개인 사이의 ‘특권’을 중심에 두므로 도덕주의가 부추겨지기 때문이다.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제국주의와 시온주의에 맞선 저항의 중요한 축이다. 이 운동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공통의 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고, 실천 속에서 하나다.

성지현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임금 회복 요구

추가로 나흘간 파업에 나서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지난주에 사흘간 파업을 진행했고, 이번 주에 나흘간 파업에 돌입한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임금을 제약당해 왔다.

2000년대 조선업이 호황기일 때 사측은 어려울 때를 대비하자며 임금 인상에 소극적이었고, 2010년대 조선업이 불황기에 접어들자 구조조정을 진행해 원·하청 노동자 3만 5000여 명을 길바닥으로 내몰았다. 남은 노동자들은 사측의 긴축 정책으로 고통에 시달렸다.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실질임금이 삭감됐다.

몇 년 전부터 조선업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자 노동자들은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하며, 그간 억제됐던 기본급이 대폭 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2021년과 2022년에 마음에 들지 않는 노조-사측 의견일치안을 부결시키고 파업에 나서 기본급 인상을 쟁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올해 조선업 업황은 매우 좋다. 수주도 많이 되고 배 가격도 올라 회사의 영업이익도 많이 늘었다. 빅3 조선사(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총 7883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911억 원 손실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증



10월 18일 파업에 나선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오토바이 행진을 하고 있다

가한 것이다. 현대중공업이 포함된 HD 한국조선해양의 증가세가 압도적이다.

이런 호황 속에서 임금 인상에 대한 열망은 더욱 강해졌다. 하지만 사용자는 지난해 기본급 인상액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했다.

노동자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고 노동조합은 교섭 잠정중단을 선언했다. 잠정중단 이후 노조는 부분파업을 진행하면서 사측을 압박했다.

노조 집행부가 파업 참여를 독려하려고 파업 대오를 이끌고 노동자 사무실이

나 생산 현장을 찾아가 소자보 작업 등을 하려 하자, 사측은 시설물 보호를 이유로 경비대와 관리자가 포함된 구사대를 동원해 파업 활동을 방해했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 수십 명이 부상당했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할 것을 우려해 신경질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생산에 타격을 주는 방향으로 전술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동조합은 10월 16일부터 3일간 파업 수위를 높이고 전술을 변화시켰다.

HD현대 소속의 조선3사 노동조합(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현대삼호)이 공동으로 파업했고, 첫 날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창립 이래 처음으로 사업장 내 한자리에 모여 파업 집회를 진행했다.

10월 18일에는 사업장 내 도로를 점거하고 물류를 막아 생산에 실질적인 타격을 줬다. 이때는 사측이 구사대를 동원해 점거 해제를 시도하지 못했다. 파업 대오의 기세도 기세였지만 그리했을 때 뒷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국정감사 기간에 경비대 폭력을 지적받은 것도 부담됐을 것이다.

그리고 10월 22일부터 4일간 파업을 결정하며 수위를 더욱 올렸다. 그러자 교섭 잠정중단 이후 재개 요청도 하지 않고 버티기를 하던 사측이 먼저 교섭을 제안했다.

현대중공업노동조합은 불황기에 빼앗긴 임금을 되찾기 위해 기본급 19만 4800원 인상에 61개의 복지 개선안을 회사에 요구했다.

호황기라고 해도 조합원이 만족할 만한 의견일치안을 만들려면 만만찮은 투쟁이 뒷받침돼야 한다. 많은 조합원이 참가해 실질적으로 생산에 타격을 주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권준모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대의원

철도 노동조합

임금 인상하고 인력 충원하라

철도 노동자들이 성과급 삭감 반대, 기본급 2.5퍼센트 인상,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부채를 이유로 임금과 인력을 옥죄어 왔다. 정부는 공공 부문 총인건비를 제한하며 '경영 효율'(즉 수익성)을 추구했다.

그러나 철도공사 부채의 상당 부분은 공공서비스와 교통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착한 적자'다. 게다가 올해 부채 비율이 더 높아진 것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과 고금리 정책에 따라 이자 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철도 노동자들은 32개 주요 공기업 중 최하위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사측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8퍼센트, 12퍼센트 성과급을 삭감했고, 앞

으로 더 삭감하려 한다.

철도노조가 지난해 성과급 삭감과 미지급 수당에 대해 임금 체불 소송을 준비하자, 사측은 올해 총인건비에서 이를 지급했다.

그래 놓고선 사측은 인건비가 부족하다며 정부가 공공기관들에 적용한 올해 기본급 인상률(2.5퍼센트)과 통상임금을 낮추고, 각종 수당을 삭감하거나 없애자고 나오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임금 삭감이다.

또한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연차 이월 사용을 강요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미사용한 연차를 연말에 임금으로 보상받아 왔는데, 내년에 몰아서 쓰라는 것이다. 지금도 부족한 인력 탓에 쓰고 싶을 때 연차를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데 말이다.

또, 노동자들은 근속과 경력에 따라 승진되도록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매년 평균 철도 노동자 두 명이 일하다가 사망하고 있다.

지난 8월에도 서울 구로역에서 선로 보수 작업을 하던 30대 청년 노동자 2명이 옆 선로에서 작업을 위해 진입하던 차량에 부딪혀 안타깝게 사망했다. 안전 감시를 전담할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고, 서로의 작업과 통행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현재 철도는 정원 대비 실제 현장에 일하는 노동자가 1000여 명 부족하다. 그런데도 사측은 정부의 공공기관 인력 감축 추진에 따라 1566명을 줄일 예정이다.

또한 4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인력 충원도 수년째 묵묵부답이다. 철도의 교대제 노동자들은 '2급 발암 물질'인 야간 노동을 줄이고자 3조2교대를 4조2교대로 전환을 요구했고, 2020년부터 시범 실시 중이다. 하지만 정부와 사측

이 교대조가 늘어난 만큼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되려 노동강도가 강화됐다.

정부와 사측은 인력 충원과 안전시스템 보완 등 실질적인 대책은 외면한 채, 기관사실을 비롯한 현장에 CCTV를 설치해 노동자를 감시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전가하려고만 한다.

지난주 진행된 철도노조의 정의행위 찬반 투표는 투표율 93퍼센트에 76.6퍼센트 찬성으로 가결됐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최저 지지율과 부패 등으로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고 생계비 고통에 대한 노동계급 등 서민층의 불만이 상당하다.

“윤석열 정부가 위기인 지금이 투쟁하기에 좋은 때입니다.”(노동환 철도노조 서울기관차승무지부장)

철도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 반대, 인력 충원 요구는 완전 정당하다.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은 철도 안전과 서비스 강화와도 직결된다.

김은영



신간 서평 | 《무함마드: 신의 예언자》

왜곡이나 신화가 아닌 역사로서의 무함마드

오늘날 무슬림을 광신도나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여기는 편견이 흔하다. 이슬람은 폭력적이고 성차별적인 종교라는 비방도 널리 퍼져 있다. 팔레스타인 연대에 동참하면서도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을 이끌고 있는 하마스가 억압적 '신정 국가'를 수립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다. 많은 자유주의자는 물론 일부 좌파도 이슬람주의(정치적 이슬람) 일반을 반동적 운동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이러한 편견과 비방은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슬람 혐오가 점점 심해지면서 무함마드도 '전쟁광,' '유대인 혐오자,' '소아성애자' 등 다양한 비방의 대상이 되곤 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카렌 암스트롱의 《무함마드: 신의 예언자》가 번역돼 출간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2002년에 국역 출판된 《마호메트 평전》(미다스북스)과는 다른 책이다.)

전직 수녀이자 종교학자인 저자는 기독교, 불교 등 여러 종교에 관한 책을 저술한 세계적 학자이다. 《무함마드: 신의 예언자》는 무함마드의 삶을 역사적 맥락에서 조명하며 무함마드를 사회 정의를 외친 개혁가이자 무슬림 공동체를 탁월하게 이끈 정치가로 그려 낸다. 그 과정에서 무함마드에 대한 편견과 비방도 해소하고자 한다.

저자는 무함마드가 전쟁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무함마드의 가르침의 핵심은 화해와 관용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쿠란의 전쟁 관련 구절들이 나온 특정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자세히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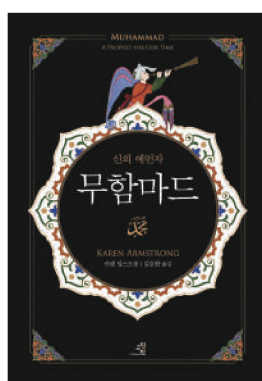
예를 들어 저자는 당시 아라비아 스텝 지역의 척박한 환경에서 물자가 부족한 시기에 '가주'(약탈)가 불가피한 일로 여겨졌으며 통상적으로 행해지던 방

편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부족에서 배척당해 메카에서 메디나로 쫓겨간 무함마드와 무슬림 공동체가 '가주'를 행했던 맥락을 편견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 준다.

맥락 속에서 보기

'유대인 혐오자'라는 비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메카 진영의 공격을 물리친 다음 날, 무함마드의 군대는 무함마드를 배반하고 메카 진영에 무기와 물자를 공급한 메디나 내 유대인 부족인 쿠라이자족 요새를 포위하고 쿠라이자족이 예전에 협력하던 사드 이븐 무아드에게 중재를 맡긴다. 사드는 당시 전통적인 판결대로 부족 남자를 전부 처형하고, 부인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팔고, 그들의 재산은 무슬림들이 나눠 가지게 했는데, 이 일화는 오늘날 무함마드가 '유대인 혐오자'였다는 비방의 근거로 자주 쓰인다.

그러나 저자는 "오늘날 우리는 이 일에 혐오감을 느낄 수 있지만, 당시 아라비아에서는 거의 모든 이가 사드의 판결을 예상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사료에 따르면 당시 쿠라이자족조차 이 결정에 놀라지 않았다는 점, 메디나 내 다른 유대인 부족들은 "이 사건을 순전히 정치적이고 부족에 관련된 문제로 간주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입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오히려 쿠란에는 당시 유대인과 기독교인같이 일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같은 신을 믿는 '책의 민족'이라고 부르며 영적인 친족 관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무함마드는 자신보다 먼저 세상에 왔던 유대교와 기독교의 예언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예언자의 일원으로 맞아들인다.



무함마드: 신의 예언자

카렌 암스트롱, 교양인, 304쪽, 20,000원

다른 모든 역사적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무함마드의 행적에는 당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이슬람이 성차별적이라는 비난에 대해서 저자는 무함마드가 오히려 당시로서는 여성들의 권리를 옹호한 진보적 견해를 취했다는 점을 알려 준다. 여자는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고 남자의 재산처럼 간주되던 시절, 무함마드가 자신의 부인들을 정치적 동료로 여길 뿐만 아니라 여성의 유산 상속과 이혼할 권리에 관한 구절을 제시받으며 성평등을 강조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여성의 지위

무함마드가 '소아성애자'라는 비방은 무함마드의 세 번째 부인인 아이샤가 여섯 살에 무함마드와 결혼한 사실에 근거한다. 그러나 저자는 당시 결혼은 동맹 체결을 위해 "낭만적이거나 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이뤄졌으며, 이러한 관습은 유럽에서도 근대 초까지 계속됐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아이샤는 결혼 전령기에 이르러서야 다른 여자들처럼 출가해 결혼 생활을 시작했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사실 아이샤는 무함마드의 생애에서 여러모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하다. 저자는 아이샤가 말에 거침없는 성격이었으며 "결코 수줍어하거나 순종하는 부인이 아니었다"고 강조한다. 무함마드가 자신이 입양한 자식의 배우자였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계시를 받을 때 옆에 함께 있었던 아이샤가 "참으로 편리하네요! 정말로 주께서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일을 서

둘러 해 주시네요!"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일화도 흥미롭다.

일부다처제는 당시 아라비아에서 흔한 일이었으며, 오히려 무함마드는 15살가량 연상이었던 첫째 부인 카디자와 사별하기 전까지는 여러 부인을 둔 적이 없었다. 저자는 무함마드의 여러 결혼이 대부분 정치적, 사회적 이유에서 이뤄졌음을 보여 준다.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아내들을 돌보기 위해서나, 다른 부족과 평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참고로 쿠란에서 일부다처제는 권장이 결코 아니라 단지 허용일 뿐이고, 그것도 조건부 허용이다.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집트,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서 일부다처 비율은 1퍼센트가 안 된다.

쿠란에 있는 '히잡' 구절에 관해서는 무함마드가 당시 적들에게 위협받고 개인 공간을 침범받는 상황에서 무함마드의 부인들에게만 가림막을 치고 남들과 구분되는 의복(이 구절에 나오는 '질갑'이라는 용어는 특정한 의복이 아니라 다양한 의복을 지칭하는 용어다)을 입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히잡의 오늘날 의미에 대해서는 "취약한 시기에 여성들의 몸은 종종 위협에 처한 공동체를 상징하며, 오늘날 우리 시대에 히잡은 움마[무슬림 공동체]를 서구의 위협에서 보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새로운 중요성을 획득했다"고 지적한다.

무함마드가 살던 7세기에 메카는 주요 무역 중심지였으며, 이로 인해 빈부 격차가 심했다. 무함마드의 사회 정의에 대한 가르침은 이러한 불평등에 맞선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족 간 전쟁과 복수가 끊임없이 이어지던 당시 무함마드는 전쟁에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평화와 화해, 자비를 강조하던 인물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저자가 책의 마지막에서 강조하듯, 무함마드는 "쉽게 이념적으로 분류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도 했지만 심오한 천재성으로 종교와 문화적 전통을 세운 복잡한 인물"이었다. 무함마드를 온전히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이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오늘날 이슬람 혐오에 맞서 억압받는 무슬림들을 잘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김동욱

공개 토론회

관심 있는 주제, 가까운 지역을 찾아 보세요

더 많은 공개 토론회
상세 정보



서울

이슬람 혐오 - 오늘날 인종차별의 주요 형태

일시 10월 24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교원투어빌딩 지하 4층 강연장 (종각역 5번 출구 도보 5분)

발제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자 국제연락간사.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등을 쓰고, 《차별과 천대에 맞선 투쟁의 전략과 전술》 등을 편집했다.

참가비 5000원 외국인 참가자를 위해 전문 통역사의 영어 동시통역 제공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지역 모임들 문의 010-4909-2026 / wsorg@ws.or.kr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21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4): 북한 사회의 대안

북한 노동계급은 억압과 착취에 맞서 떨쳐 일어날 수 있을까?

스탈린주의자들은 북한을 계급 분열과 계급 갈등이 없는 (사회주의) 사회로 보므로 북한 노동계급이 체제에 맞서 저항할 리 없다고 믿는다. 만약 북한에서 대중 반란이 일어난다면 필시 그들은 그것을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조종한 '색깔 혁명'으로 치부할 것이다.

북한을 전체주의 사회로 보는 견해는 스탈린주의 북한관의 거울 이미지다. 전체주의론은 국가의 폭력과 감시를 특별히 강조한다. 북한 사회 곳곳에 침투한 억압과 감시의 그물망 때문에 개인의 자율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은 모두 원자화돼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 대중은 체제에 맞서 저항하는 데 필요한 조직화를 해낼 수 없다고 본다.

이렇게 전체주의론은 북한 사회의 동인을 포착하지 못하고, 자체 변화 가능성도 보지 못하게 한다. 그 정치적 함의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이 이토록 억압적인 전체주의 사회이니, 남한에서 사회주의 같은 근본적 사회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 사회와 (현상 형태는 달라도) 본질이 다르지 않은 자본주의 사회다. 그리고 중공업 중심으로 상당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는 북한에 노동계급이 대규모로 형성돼 있음을, 그리고 북한 사회도 계급 모순과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뜻한다.

물론 오늘날 북한에서 노동자들이



북한 노동계급은 혁명으로 진정한 사회주의를 구현할 잠재력이 있다. 평양 326전선종합공장의 모습

자체의 조직을 만들거나 반란을 일으키는 쉽지 않다. 제국주의간 갈등을 배경으로 한 한반도 주변 정세의 불안정도 북한 노동자들에게 이데올로기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의 계급 갈등

그렇지만 착취와 축적의 현실 때문에 북한에서도 계급 갈등은 불가피하고, 마르크스가 썼듯이 북한 노동계급은 지배자들을 상대로 “때로는 공공연한 또 때로는 은밀한” 총돌을 벌일 수 있다.

북한 형법에는, “집단적으로 소동을 일으킨 자”(249조 집단적소동죄)나 “출판 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254조 출판질서위반죄) 등을 노동단련령으로 엄히 처벌하는 법령이 있다.

이렇게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령의 존재는 북한 관료가 대중 저항의 가능성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수십 년 동안 지배 체제를 유지해 온 북한 관료도 근본적 모순을 피할 수는 없다. 그것은 바로 지속적인 자본 축적을 위해 생산수단을 끊임없이 혁신해야 할 필요성이다. 이것이 바로 체제를 위기에 빠뜨리는 내부로부터의 근본 동력이다. 이런 위기가 일어날 때 아래로부터 반란이 터져나올 빈틈이 열릴 수 있다.

또한 북한은 고립된 섬이 아니다. 만

약 북한과 지리적으로 밀접하고 여러모로 긴밀한 중국에서 노동자 반란이 대규모로 분출한다면 북한 사회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북한의 노동계급이 더 나은 삶을 누리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아래로부터 사회주의라는 대안이 필요하다. 노동계급이 기존 국가를 분쇄하고 자기 자신의 민주적 국가를 세우는 노동자 혁명 말이다.

과거 동구권에서 노동자들이 그렇게 진정한 사회주의를 건설할 잠재력을 잠깐 보여 준 바 있다. 1956년 헝가리 노동자들은 스탈린주의 관료에 맞서 혁명을 일으켰다. 그리고 1917년 러시아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평의회를 곳곳에 세웠다.

비록 소련군에 의해 결국 패배했지만, 당시 헝가리 노동자들은 사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스스로 조직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해방은 대북 전단 살포 같은 외부 개입이 아니라 북한 노동계급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다. 북한 노동자들은 그럴 잠재력을 갖고 있다.

북한에서 노동자들이 저항에 나선다면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들이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를 구현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이 글은 본지의 기본 입장을 해설하는 기획 연재의 스물한 번째 글이다. 다음 연재에서는 냉전기 반(反)스탈린 투쟁과 1956년 헝가리 혁명에 관해 다룰 것이다.



▶ 16면에서 이어짐

리타니강 남쪽에 북쪽에 누가 살아야 한다고 참견할 권리가 이스라엘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의 땅이고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 것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가자 학살 1년 국제 행동의 날'에서 당신은 레바논인들이 굳건히 버티고 있다고 연설했습니다.

지금 레바논인들에게는 살아남는 것이 저항입니다. 레바논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 돕고 있습니다. 시아파 사람들이 수니파 지역에서 환영받고 있습니다. “같은 동포”라며 말이죠.

피란민을 위해 빈방을 내주고, 제가 가던 극장 건물도 지금은 대피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저처럼 국외에 사

는 레바논인들이 역할을 하도록 조직하는 활동도 활발합니다.

이런 활동의 상당 부분은 시민기구들이 진행합니다. 이들은 “모든 레바논인들을 위한 단일한 레바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종교와 종파에 따른 분단에 반대합니다. 2019년 10월 항쟁당시에 활발하게 활동한 단체들이기도 합니다.

서울에서의 그날 집회는 아주 원칙 있고, 열정적이고, 또 무척 포용적이었습니다. 한국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어디를 가든 팔레스타인 지지 운동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인터뷰·정리 김종환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 설정

- ▶ 다양한 주제의 토크 영상
- ▶ 주요 시사 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 63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지금 구독하세요!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s.or.kr/what-we-stand-for

기본입장

ws.or.kr/join



레바논인 활동가 인터뷰

“팔레스타인과 아랍 세계의 해방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레바논인 **라니아 하페즈**(사진)를 서울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영국 그리니치 대학교 강사이자 활동가이고, 10월 6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주최한 '가자 학살 1년, 국제 행동의 날'에 연설한 바 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때문에 레바논을 공격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헤즈볼라와 싸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민간인을 고의로 죽이고, 기반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 사촌의 집도 폭격당했습니다. 운이 좋다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뇌종양을 앓고 있어서 요양 때문에 집을 비운 상황이었습니다. 집을 대체 왜 폭격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부수적 피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을 폭격하는 것은 정당합니까?

지금 레바논 남부는 폐허가 됐습니다. 나바티예라는 남부 도시에서는 시민이 선출한 시장까지 폭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헤즈볼라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스라엘은 우리 레바논인들과 레바논 정치조직들에 이런저런 딱지를 붙인 후, 그 중 하나를 구실로 삼는 것뿐입니다. 실제로는 중동 내 자신의 헤게모니와 이익을 지키고 자신에 맞서는 세력들을 침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레바논을 침공하나요?

레바논은 팔레스타인인 난민들이 최초로 찾은 곳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건국되기도 전인 1947년에 유대인으로 이뤄진 테러리스트 갱단이 팔레스타인인 마을들을 공격했을 때 팔레스타인인들은 레바논과 요르단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조만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누이의 남편은 팔레스타인인이고, 그의 부모님은 나크바 때 레바논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누이의 시할아버지는 유대인 테러리스트 갱단의 손에 목숨을 잃었고, 시할머니가 임신한 몸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레바논으로 온



“레바논에서 손 떼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집회에서 연설하는 라니아 하페즈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레바논에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또 마땅히 그럴 자격이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시온주의 국가는 이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자신은 “임자 없는 땅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아니, 그건 우리땅이고 우리는 돌아가길 바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깐요.

팔레스타인 해방과 레바논의 해방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겠군요.

레바논뿐 아니라 아랍 세계 전체의 해방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일부 아랍 정권들이 이스라엘과 거래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 없이는 평가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랍 세계 심장부 한가운데에서 엄청난 불의가 자행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습니까? 정의란 공평과 평등,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를 보장하고, 자신의 민족성

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착민 강탈을 기반한 국가가 존재한다면, 그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서방 정부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대리인처럼 행동합니다. 일종의 ‘대리인에 의한 식민지배’라고 할 법한 상황입니다.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 싸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민간인을 고의로 죽이고 있습니다.”

저는 식민 정착민 국가에 ‘존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국가 방안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소수파가 온전한 권리를 누리고, 종교를 떠나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비종교적 국가 말입니다. 그것만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헤즈볼라가 레바논의 리타니강(江) 북쪽으로 물러나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멈출까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리타니강 이남 지역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남부를 30년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항이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도 압니다.

비록 저는 헤즈볼라에 이견이 있지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점령에 저항하는 활동 속에서 부상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점령했었다는 것을 모르거나 너무도 쉽게 잊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스라엘이 베이루트와 남부를 주기적으로 폭격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 15면으로 이어짐

노동자연대 TV

팔레스타인, 레바논 ... 고조되는 중동의 전문 제국주의, 저항, 혁명

10월 30일(수) 오후 8시 유튜브 실시간 방송 **노동자연대TV** 2부

※ 전문 통역사의 순차 통역이 제공됩니다.

발제
시문 아사프
레바논 마르크스주의자로 현재 영국에서 활동. 레바논의 좌파 언론 '알 만슈르'와 '퍼블릭 소스'의 편집위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

문의 02-2271-2395, 010-4909-2026 (문자 가능) wsorg@ws.or.kr